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의 영향요인 분석: 취임1년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이 곤 수**

- <目 次>-----
- I. 머리말
 - II. 이론적 논의와 분석 틀의 구성
 - III. 분석 결과 및 논의
 - IV. 맺는 말

<요 약>

이 연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투표선택 분석에서 설명력이 입증된 경제투표이론을 기본적 분석렌즈로 채택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적 상황에서 경제적 요인의 설명력 한계를 감안하여 전통적 정치요인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을 대통령지지의 설명변수에 도입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경제적 요인은 개인적 경제상황, 국가적 경제상황, 경제악화 정부책임, 경제정책평가이며, 비경제적 요인은 정부성과(대북정책), 정책이념(경제성장 vs. 양극화해소), 정치이념, 정당일체감 및 정부신뢰 등이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동아시아연구원의 여론조사(2009년 2월)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망적 평가가 가장 영향력 높은 요인이며 국가경제악화에 대한 정부책임 인식 또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비경제적 요인으로는 정부신뢰와 정당일체감이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인적 속성으로 성별,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대통령지지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대통령지지, 국정운영평가, 경제투표】

* 이 논문의 완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조언을 해 준 EAI 여론분석센터 정한울 부소장님과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 동아시아연구원(EAI) 거버넌스연구팀장(ksyi@eai.or.kr)

논문접수일(2009.4.27), 수정일(2009.6.19), 게재확정일(2009.7.8)

I. 머리말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여론의 지지는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 기반이다. 대통령 중심의 정부체제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상당한 저항이 수반될 수 있는 정부개혁이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¹⁾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제침체, 실업률의 증가, 경제적 양극화 문제 등 한국이 당면한 심각한 경제·사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추진력과 더불어 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집권 1주년을 맞이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른 바 ‘허니문 효과’도 거의 없이 급락하면서 2009년 2월 현재 32.2%에 불과한 실정이다(동아시아연구원, 2009).²⁾ 지지율 저하의 심각성은 무엇보다 국가적 위기에 대응한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 감소의 이유에 대해서는 취임이후 인사 문제, 정치적 리더십의 부족,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촛불시위와 같은 시민 저항, 국제적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제적 위기 확대와 그에 따른 각종 경제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대부분 저널리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며, 학술적·경험적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서구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지지에 대한 연구는 대통령선거 분석과 더불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통령 지지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되었다는 점, 1990년대 민주화이후 지역주의나 이념적 대결 양상을 보였다는 점 등으로 대통령지지에 관한 다양한 설명 가능성이 매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1)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presidential approval)는 국민들이 느끼는 “대통령직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로 정의된다(Kernell, 1978; MacKuen, 1983; Mueller, 1970). 대통령지지도는 국민들이 느끼는 대통령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나타내며, 나아가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지도가 높을 경우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지지도가 낮을 경우 대통령의 활동과 계획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지지도는 대통령의 결정과 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게 된다(가상준, 2005: 154, 156).

2) 미국 조지 W. 부시의 임기 8년의 평균지지율은 49.4%로 이라크전쟁과 아프카니스탄전쟁, 그리고 금융위기 속에서도 50%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이나 섹스스캔들로 도덕성 위기를 맞았던 빌 클린턴 또한 평균 52.8%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대통령지지율 실태를 알 수 있다(조기숙·남지현, 2007: 205). 특히 대통령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대통령선거를 다시 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7.4%에 불과하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9.7%로 나타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시사저널, 2009. 2. 18. 통권 1009호).

렇지만 노무현정부 이후 각종 여론조사결과는 이러한 이념적·지역주의적 선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 이슈가 부각되어 다른 문제를 압도하였고 이것이 선거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한 일부 연구자들은 대통령선거 분석을 통해 유권자의 후보선택이 과거와 달리 경제적 요인의 설명력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권혁용, 2008; 이재철, 2008; 정한울, 2007)³⁾

사실 Mueller(1970)이후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경제적 요인을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명인자로 다루어 왔다(Davis and Langley, 1995). 그러나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안정성이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정치행태에 대한 경제적 설명력이 제한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최근 선거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적 선택모형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설명변수로는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첫째, 경제투표이론에서 강조되는 경제적 요인의 대통령 지지 분석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잠재적 설명 변수로서 비경제적 요인을 검토한다. 둘째,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결합한 분석 모형을 구성한다. 셋째, 여론조사 자료를 적용하여 대통령 지지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넷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지지의 실천적·이론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II. 이론적 논의와 분석 틀의 구성

Muller(1970) 이래 대통령지지 연구들은 대체로 대통령 지지의 누적적 추세(aggregate trends)에 초점을 두고, 특히 사건, 경제, 미디어보도행태, 시간 등 주요 변수들의 인과성을 검증해 왔다(Druckman and Holmes, 2004). 여기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되어 온 대통령 지지의 설명변수들을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대통령 지지에 대한 경제적 영향요인

대통령지지와 같은 정치적 행동선택에 관한 경제적 설명의 전형은 경제투표

3) 물론 그 이전에도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관한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예를 들면, 박경산, 1993; 이현우, 1998).

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합리적 개인을 상정한 이 관점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개인적이고 이기적 이익에 입각해 투표한다는 것이다. 즉, 유권자들의 지지는 정부정책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효용에 따라 결정되는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경험한 유권자들은 지지를 표시함으로써 보상을 주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벌을 준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초기 연구자인 Kramer(1971)는 경기가 좋아지면 집권당의 지지도가 증가하지만, 경기가 악화되면 비집권당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후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경제요인과 정치적 지지간의 밀접한 관계가 밝혀졌다(Kirchgaessner, 1991; Rattinger, 1991).

이와 같이 경제적 여건이 대통령과 정당 지지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지만, 경제적 선택의 자동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쟁점은 유권자의 경제상황 인식 및 평가의 준거 기준과 관련하여 단순 상별모형의 가정처럼 회고적(retrospective) 판단에 의존하느냐 아니면 합리적 기대모형에 기초한 전망적(prospective) 판단에 의존하느냐 하는 것과 유권자의 경제상황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초점을 둔 자기중심적(egocentric) 인식이냐 아니면 국가경제 지표를 준거로 하는 이타적 혹은 사회지향적(sociotropic) 판단이냐에 관한 것이다.⁴⁾

실증연구들의 결과는 과거의 경제실적에 대한 회고적 판단보다는 미래에 대한 전망적 판단이, 개인적 경제여건 변화보다는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Erickson and Tedin, 2005; Kiewiet and Udell, 1998; Kiewiet and Kinder, 1981; Lewis-Beck and Stegmaier, 2000).⁵⁾ 대통령지지에 대해서도 개인적 재정상황 보다는 국가경제상황에 대한 시각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Kinder and Kiewiet, 1979; Kramer, 1983; Norpoth, 1996). 한국의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유권자의 투표선택에는 전망적 경제인식과 사회지향적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유권자들은 개인적 경제 상황보다는 상위의 국가 경제의 전망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이타적 투표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권혁용, 2008; 이현우, 1998; 정한울, 2007).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정치발전 정도나 정치체제의 제도적 차이, 혹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측정데이터의 수준과 분석기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투표이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4) MacKuen, Erickson, and Stimson의 “Peasants or Bankers?”(1992)이후 경제적 여건과 정치지도자의 지지도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경제 인식(economic perception)이 객관적인 경제적 조건(objective economic conditions)을 대체한 주요 변수로 사용되었다.

5)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경제 인식이 자기중심적이기 보다는 사회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회고적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전망적으로 판단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Cohen, 2004: 29).

한다(Anderson, 2007; 권학용·정한울, 2009).

대표적으로 Rudolph(2003)는 제도적 차원에서 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 개인적 차원에서 정당당파성(partisanship), 경제적 이념(economic ideology) 등의 요인들이 유권자의 경제실적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차이를 가져오며, 특히 이러한 요인들은 경제실적의 책임 귀속에 있어 인식의 분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단의 학자들은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제약요인, 이념과 정당일체감 같은 가치관 및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경제상황의 인식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Anderson, 2007; Gomez and Wilson, 2006). 심지어 유권자의 합리적 경제인식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정당당파성과 같은 개인의 정치적 선호에 의해 채택된 선택적 정보에 의한 인지 왜곡의 결과물로 파악되기도 한다(Conover et al. 1987; Bartels, 1999). 이와 같은 경제투표이론에 대한 비판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경제적 요인과 대통령지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설계할 때는 이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⁶⁾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경제인식이 정치적 지지로 연결되는 메커니즘 차원에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Rudolph(2003)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 상황에 대한 회고적 판단이 정부지지에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전환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경제 요인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반응은 경제적 악화나 개선의 책임소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인정할 경우, 유권자의 이질성을 전제로 경제투표모형에 책임소재 변수를 추가하여 회고적 투표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접근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정한울, 2007).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지지에 미치는 경제변수의 영향력 분석에 있어 상대적 설명력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구 선진국과 달리 경제적 안정성이나 정치적 민주화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비경제적 요인이 대통령 지지에 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제3세계 국가와 동일선상에 둘 수는 없지만, 미국이나 서유럽국가에서처럼 경제투표의 영향력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만일 한국에서 대통령지지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면, 경제적 요인과 함께 비

6) 이러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은 대통령 지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대통령지지에 관한 경제투표 분석으로 거의 유일한 국내연구인 김영태(2005)에 따르면, 실업률이 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지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경제투표 이론의 일반적 가정과 달리 경제적 변수의 작용방향이 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즉, 경제적 여건이 나쁠 때 대통령 지지도가 상승함-이다. 저자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경제회복의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추론하면서 대통령지지도에 전망적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제적 요인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대통령 지지에 대한 비경제적 영향요인

경제적 요인이 대통령지지를 설명하는 필요조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면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검토는 불가결하다. 대통령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으로는 정부성과, 정당일체감, 이념, 및 사건 등의 정치적 요인을 찾을 수 있다.⁷⁾

첫째,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정부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여기에는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분야의 정책들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경제성과에 대한 판단이 대통령지지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경제변수만으로 대통령지지의 역동성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적 성과 만큼 외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Aldrich, Sullivan, and Borgida, 1998; Holst, 1996; Nickkelsburg and Norpoth, 2000).⁸⁾ 한국에서는 17대 대선에서 경제 문제 외에 남북문제가 대통령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양건모·오숙영, 2008: 444).

다음으로 정당일체감은 일반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으로 정의되는데(김장수, 2007: 23), 주류 선거연구자들에게 정당일체감은 개인적 정치행태 결정의 핵심요인으로 평가된다(가상준, 2004).⁹⁾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대통령 지지의 설명변수로서 정당일체감은 대통령의 소속정당과 국민의 선호정당간의 일치여부에 의해 대통령 평가에 차이를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7) 이외에도 일단의 학자들은 미디어 보도행태(media coverage)나 대통령 인물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Edwards et al., 1995; Newman, 2004).

8) 미국의 대통령 지지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통령이 중점을 두는 사안이나 언론이 주목하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영역으로 분석되었다(가상준, 2005: 498). 보다 최근에는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이 혼합되는 영역으로서 국제경제(international economy)가 대통령지지의 주요 변수로 다루어지기도 한다(예를 들어, Burden and Mughan, 2003).

9) 정당일체감은 미국의 대통령선거의 고전적 연구에서 출발하여 1960년대 미시간학파로 대표되는 선거연구의 주류 시각으로 자리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대한 정당일체감의 영향에 관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은 유권자의 정치적 대상에 대한 심리적 호·불호를 편향하고 왜곡하는 가장 궁극적 투표결정요인이다. 여기에 대해 합리적 유권자관에 입각한 수정주의자들은 유권자의 특정정당에 대한 선호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정당선호는 집권당의 업적에 조응하여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정당일체감은 집권당의 업적에 대한 인지요인과 정당일체감의 인과관계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따른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장수(2007: 23-28)를 참고할 것.

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한나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된다.

정치이념 또한 정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이다. 한국정치에서 이념의 영향은 1997년 대통령선거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여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념균열”이라 칭할 만큼 강하게 드러났다. 경험적 분석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대통령후보 지지에 분명한 차이를 있음을 확인하였다(강원택 2003, 김욱, 2006; 조성대, 2004). 그렇지만 2007년 선거에서는 경제적 이슈가 지배하면서 이념의 정치적 동원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강원택, 2009: 95). 그러나 선거와 다른 차원에서 국가개입 정도나 사회정책 방향성 등 정부정책의 근저에 있는 이념적 차이를 고려하면 정책 이념 또한 대통령 지지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여건 외에 대통령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에는 국가상황과 관련된 극적인 사건(dramatic events)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상회의, 국제행사, 국익을 위협하는 국제적 위기, 암살시도 등과 같이 국민적 단합이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은 국가의 상징인 대통령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¹⁰⁾ 부정부패, 스캔들, 시민저항, 폭동, 스트라이크, 경제위기 공표 등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지지도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Brace and Hinkley, 1991: 997-998; Lewis-Beck and Stegaier, 2000: 184). 그 외에 대통령지지율 변동과 관련하여 중시되는 것으로 시간(time) 변수-대표적으로 대통령직의 취임에서 임기마감까지의 생애주기-가 있다. Mueller(1970)와 Stimson(1976)에 의해 대통령 지지도는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래, 시간 변수는 대통령 지지의 주요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지지의 변동을 설명하는 시간적 요인이 허니문효과이다. 허니문효과는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 취임 초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선거연구나 대통령지지에 대한 정치적 측면에서 논의된 영향변수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연구자는 대통령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변수로 ‘정부신뢰’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신뢰는 정부에 대한 평가적·감정적 정향으로서, 정부가 국민의 뜻에 보다 일치하며 공익에 충실하도록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믿음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이숙종, 2006: 2). 이런 점에서 정부신뢰는 혼히 정치체제나 정치적 인물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가상준, 2004). 그런데 대통령지지와 정부신뢰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은 신뢰와 지지의 개념적 혼란의 문제이다. 실제로

10) 이와 같이 전쟁이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을 ‘결집효과’로 일컫는다.

정부신뢰의 개념적 불명확성으로 인해, 정치태도 연구에서 평가대상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¹¹⁾ 그렇지만 양자의 개념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개 신뢰는 “긍정적 기대와 취약성을 감수하려는 의지와 같은 심리적 태도”로 규정되는 반면, 지지는 국민들의 특정 정치적 행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Mayer et.al., 1995). 그리고 정부신뢰를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이 정부의 행동(주로 정책)에 대해 취하는 긍정적 기대나 심리적 지지”로 이해할 경우(손호중·채원호, 2005: 89),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의 선행변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양건모·오숙영, 2008; 이시원, 1993: 34).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정부신뢰를 대통령지지에 대한 잠재적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¹²⁾

3. 분석모형 및 가설설정

앞에서 검토한 대통령지지에 대한 경제적 설명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비경제적 요인의 적용 필요성 등에 근거하여 대통령지지의 설명 모형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이 모형은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진 모든 잠재적 설명변수들을 포괄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제적 요인을 기초로 하면서 선행연구들에서 강조된 비경제적 요인들을 도입하였다.

[모 형]

$$Y = a + b_{1i}X_{1i} + b_{2i}X_{2i} + b_{3i}X_{3i} + \varepsilon$$

11) 예를 들어, 박종민(1991)은 정부신뢰를 국정 담장자인 집권행정부에 대한 지지로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부신뢰와 대통령지지는 동일한 개념이 된다.

12) 신뢰와 지지의 인과성 가정을 대통령지지에 적용하면, 정부신뢰가 선행된 후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신뢰가 대통령후보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양건모·오숙영(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지지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신뢰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서 신뢰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정부신뢰와는 구분된다. 사실 정부신뢰 개념은 정부 조직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측정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신뢰 대상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담당집단과 정부활동의 주체인 경력직 공무원 집단이 포함된다. 따라서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신뢰는 공무원집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신뢰 개념과 대통령과 집권당국에 대한 신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변수의 구성

| 변수 | 하위 변수 |
|----------------------|--|
| X1i 경제적 변수 | X11 개인경제상황 평가(긍정-부정) X12 국가경제상황 평가(긍정-부정) X13 경제상황 책임소재(정부책임 d) X14 경제정책 평가(긍정-부정) |
| X2i 비경제적 변수 | X21 정부성과(대북정책) X22 정책선휴(경제성장 d) X23 정책선휴(양극화해소 d) X24 정치이념(진보-보수) X25 정당일체감(한나라당 d) X26 정부신뢰(긍정-부정) |
| X3i 개인적 변수 (통제변수) | X31 성별 X32 연령 X33 학력 X34 소득 X35 지역(영남 d) X36 지역(호남 d) |
| Y 종속변수 | 대통령 지지(국정운영 평가) |

d = 더미변수

경제적 요인은 회고적 투표 모형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 책임소재변수를 추가하였다. 전망적 투표를 측정하는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예측변수를 제외한 것은 대통령후보 투표결정과 달리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는 미래 경제에 대한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주된 영향을 준다고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기대 효과는 정책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였다.¹³⁾ 비경제적 요인은 대통령지지 분석에 검토된 정치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¹⁴⁾

종속변수인 대통령 지지의 개념은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 정의하고, 대통령 지지도는 “귀하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한 4점 척도(매우 잘한다/대체로 잘한다/대체로 잘못한다/매우 잘못한

13) 정부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요기간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 있어 경제정책 평가에는 국민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경제정책평가는 전망적 평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4) 구체적인 설정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주관적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기준으로 하고, 단일의 여론조사를 이용한 획단연구에서 분석의 실익이 없거나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건)이나 시간 등의 변수는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다: 4→1 역코딩)로 측정하였다.¹⁵⁾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매우 잘한다+대체로 잘한다)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경제적 변수군과 비경제적 변수군 및 개인적 변수군(통제변수)으로 구분된다. 대통령 지지를 설명하는 경제적 변수에는 개인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국가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경제상황의 책임소재 인식, 그리고 경제정책 평가 등이다.

H1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국가 경제적 여건에 대한 인식은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정부책임 인식은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 및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는 지난 1년간의 경제상황에 대해 5점 척도(매우 좋아졌다/약간 좋아졌다/현상유지/약간 나빠졌다/매우 나빠졌다: 5→1 역코딩)로 측정하였다. 경제상황 책임소재 인식변수는 국가경제악화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귀속시키는지를 정부, 정당 및 국회, 기업, 국민 개개인, 기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인식이 대통령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모형에는 정부책임더미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경제정책 평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관한 평가적 인식("현재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을 4점 척도(매우 잘 대처함/대체로 잘 대처함/그다지 잘 대처하지 못함/매우 잘못 대처함: 4→1 역코딩)로 측정하였다.

대통령지지를 설명하는 비경제적 변수에는 정부성과, 정책선호, 정치이념, 정당일체감, 정부신뢰 등이 있다.

H5 대북정책의 정부성과에 대한 판단이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정책우선순위의 선호에 따라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정치이념의 차이가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대통령에 대한 정당일체감은 대통령 지지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정부신뢰도가 높을수록 대통령지지도가 높을 것이다.

정부성과(대북정책) 변수는 대통령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성과

15) 이 문항은 Gallup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 지지를 측정하는 질문으로 사용된 아래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의 표준 문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외에 다른 정책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선거연구에서 부분적 영향력이 검증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안보상황 인식을 변수를 선정하여,¹⁶⁾ “귀하께서는 북한이 전쟁이나 군사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4점 척도(매우 높다/약간 높다/별로 없다/전혀 없다: 1-4점)로 측정하였다. 정책이념의 측정은 우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국민통합/경제양극화완화/남북관계개선/정치개혁/경제성장/국제경쟁력강화/삶의 질 개선/국가안보강화/기타)인식을 측정한 뒤, 정책이념에 따른 지지도의 변이를 검증하기 위해 상반적 정책이념을 반영하는 경제성장과 경제양극화의 2개 응답을 각각 더미로 회귀모형에 도입하였다. 정치이념은 진보-중도-보수 성향을 0-10점 사이에서 측정하였다. 정당일체감은 대통령소속정당과의 일치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지지정당(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친박연대/기타/무당파)을 조사한 뒤, 한나라당지지를 더미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정부신뢰의 측정에는 “귀하께서는 정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단일문항에 대해 4점 척도(매우 신뢰/약간 신뢰/별로 신뢰 않음/전혀 신뢰 않음: 4→1 역코딩)로 조사하였다.

통제변수에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및 지역의 5개 변수를 포함하였다. 투표 선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성별, 교육, 연령, 소득 등은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통제된다. 이질적 유권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 통제변수들은 대통령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이기도 하다.¹⁷⁾ 사회계층의 측면을 나타내는 소득과 교육은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

16) 대북정책 외에도 사회정책, 환경정책, 교육정책, 개발정책 등 논쟁적 이슈가 되는 정책영역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영역을 포괄하는 것이 대통령지지도 검증의 타당성이 높을 것이지만, 정책성과의 제한적 측정으로 인해 대통령지지에 미치는 정부성과에 대한 설명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경제정책외의 정부성과를 대북정책으로 한정한 것은 대통령지지와 투표 등 정치적 선택에 가장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영역이 외교정책(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대북정책)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 이전의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대치상황을 가져 왔다는 점에서 경제성과에 대응되는 정부성과 영역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대통령선거의 분석결과를 보면, 남북문제는 유권자들이 이명박 후보와 다른 후보(정동영, 권영길)간에 문제해결능력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국정과제영역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양건모·오숙영, 2008).

17) 미국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민주당대통령 평가에 좀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Gilens, 1988), 높은 교육수준의 미혼 여성일수록 민주당에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 (Weisberg, 1987),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공화당 대통령에 우호적이이며 소득이 상승할 수록 공화당에 우호적이라는 분석결과(Erickson and Tedin, 1995) 등이 있다(가상준, 2004: 499에서 재인용).

적인 변수이다. 한국에서는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소득수준과 세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연령변수는 세대간 심각한 균열양상을 보일 만큼 투표선택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김민전, 2008; 김욱, 2006).¹⁸⁾ 또한 유권자 출신지역은 한국정치의 지역주의적 특성과 연계되어 개인의 정치행태를 형성하는 주요 변수로 인정되고 있다(강원택, 2008; 이재철, 2008).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역변수에는 제주도를 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표본추출의 준거로 사용하였지만, 회귀모형에는 기술통계의 분석결과 대통령 지지도의 상이성을 보이는 영남과 호남의 2개 지역을 더미변수로 도입하였다.

H10 여성일수록 대통령 지지도가 높을 것이다.

H11 연령이 높을수록 대통령 지지도가 높을 것이다.

H12 학력이 높을수록 대통령 지지도는 낮을 것이다.

H13 소득이 높을수록 대통령 지지도는 높을 것이다.

H14 지역주의가 대통령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분석 결과 및 논의¹⁹⁾

1. 대통령지지와 선행 변수의 기술통계

1) 대통령지지도와 개인속성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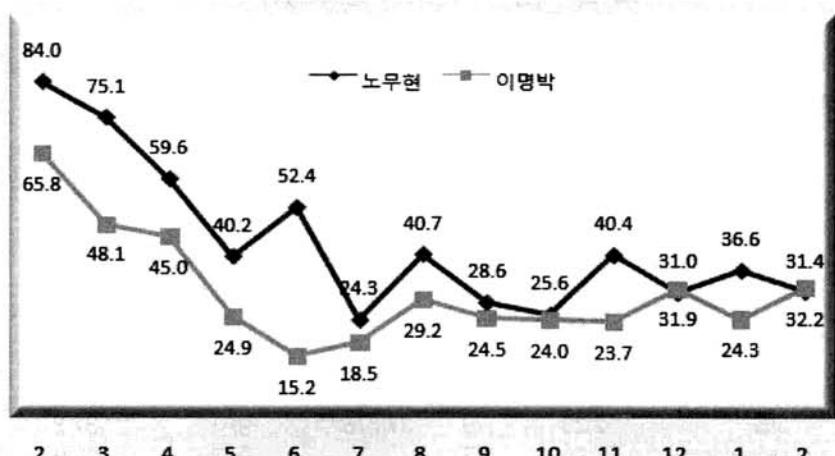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값 2.09(표준편차 .80)로 나타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상당히 낮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대통령지지의 평가 기준인 지지율로 보면 32.2%에 불과하며, 전체의 66.2%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모름/무응답 1.6% 제외). 이와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의 변동은 같은 시기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지율(31.4%)과 비

18) 그렇지만 17대 대통령선거 분석결과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 개인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양건모·오숙영, 2008; 이재철, 2008).

19)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 대통령취임 1주년 국가현안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2009년 2월 7일~9일의 기간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 비에 따라 다단계층화추출된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이다. 동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응답자 특성은 <부록 표>로 작성하였다.

슷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취임이후 변동 폭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하여 6월에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노무현대통령의 지지를 하락세 보다 더 빠른 양상을 보이면서 취임초기에 나타나는 허니문 효과도 거의 유지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추이



주: 노무현대통령 2003.2.~2004.2.; 이명박대통령 2008.2~2009.2.

자료: 03.2.=코리아리서치; 03.3, 6=미디어리서치; 03.4, 5, 9, 10.=한국갤럽;

03.7, 8, 11, 12, 04.1.2.=한길리서치; 08.3~09.1=KSOI(<http://www.ksoi.org/>)

08.2, 09.2=동아시아연구원(EAI: <http://www.eai.or.kr/>)

이와 같은 대통령 지지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속성변수에 따른 차이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대통령 지지도에 있어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권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고).

성별 지지도의 평균은 남자 2.02(표준편차 .79), 여자 2.15(표준편차 .81)이며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지율을 기준으로 할 때는 남자가 27.5%인데 비해 여자는 32.5%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뚜렷한 지지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연령·학력·소득수준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LSD 사후검증 결과 20대와 30대 연령층간에만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을 뿐 다른 모든 연령층간에는 지지율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40대의 지지도 평균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반면에 50~60대 이상에

서는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대통령 지지차이의 특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해 학력은 높을수록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값을 보면 고졸이하는 전체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대졸이상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판적 정치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대통령지지에서도 볼 수 있다.

〈표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대통령지지

| | | 평균 | 표준편차 | t/F 값 | 사후검정 ^a | 지지율(%) |
|----|-----------|------|------|-----------|-------------------|--------|
| 성별 | 남자 | 2.02 | .79 | 2.463* | 40/50/60 | 29.1 |
| | 여자 | 2.15 | .81 | | | 32.5 |
| 연령 | 20대 이하 | 1.81 | .66 | 38.206*** | 40/50/60 | 13.2 |
| | 30대 | 1.80 | .76 | | 40/50/60 | 19.7 |
| | 40대 | 2.06 | .82 | | 20/30/50/60 | 31.5 |
| | 50대 | 2.35 | .76 | | 20/30/40/60 | 46.0 |
| | 60대 이상 | 2.58 | .72 | | 20/30/40/50 | 61.0 |
| 학력 | 중졸 이하 | 2.66 | .66 | 37.276*** | 고/대 | 60.1 |
| | 고졸 | 2.20 | .79 | | 중/대 | 37.3 |
| | 대졸 이상 | 1.90 | .77 | | 중/고 | 22.9 |
| 소득 | 200만원 이하 | 2.26 | .84 | 4.548** | 300/400/401 | 42.4 |
| | 201-300만원 | 2.05 | .77 | | 200 | 29.0 |
| | 301-400만원 | 2.03 | .77 | | 200 | 29.3 |
| | 401만원 이상 | 2.04 | .80 | | 200 | 30.6 |
| 권역 | 수도권 | 2.06 | .82 | 5.740*** | 영남/호남 | 31.2 |
| | 충청권 | 2.04 | .75 | | 영남 | 28.5 |
| | 영남권 | 2.23 | .77 | | 수도/충청/호남 | 38.8 |
| | 호남권 | 1.83 | .77 | | 수도/영남/기타 | 19.1 |
| | 기타 | 2.31 | .81 | | 호남 | 52.3 |

주: 성별 = t-검증; 연령, 학력, 소득, 권역 F-검증

a) LSD 사후검정 결과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만 기재하였음($p < .05$).

단, 권역의 사후검증은 각 지역별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임($p < .05$).

소득에 있어서는 유의확률 $p < .01$ 수준에서 대통령 지지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이러한 차이는 200만원이하 저소득층과 나머지 소득계층간에만 유의하다. 즉 다른 소득계층보다 200만원이하 저소득층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권역별로는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 간에 극명한 균열양상은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지역에

따른 유의한 지지차를 보인다.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기타권역을 제외하면 영남권이 가장 지지도가 높고, 그 다음으로 수도권, 충청권의 순이며, 호남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지지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영남이 38.8% 전체지지율보다 상당히 높고 수도권은 31.2%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반면에, 충청권 28.5%로 다소 낮으며 호남권은 호남권 19.1%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 대통령 지지의 지역적 분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간 차이에 관한 사후검증 결과에서도 주로 영남과 호남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는 데, 영남은 수도권·충청권·호남권과 호남은 수도권·영남권·기타권역과 대통령지지에 유의한 차이를 가진다($p<.05$).

2) 경제적 요인 및 비경제적 요인의 실태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먼저, 경제상황인식에 있어서 개인경제여건은 평균 2.41(표준편차 .81)로 나타나 상당히 가정경제가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국가경제여건에 대해서는 평균 1.49(표준편차 .67)로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경제상황에 대해서는 93.1%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58.9%는 매우 나빠졌다고 평가할 만큼 국가경제에 대한 위기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악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가 4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정당/국회가 18.0%로 높게 나타나, 대체로 국가경제악화의 책임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도 평균 1.99(표준편차 .67)로 매우 부정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긍정적 평가가 20.3%인데 비해 부정적 평가는 78.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면, 가정경제와 국가경제 상황이 모두 1년 전보다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크다.²⁰⁾ 특히 국가경제는 절대 다수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악화에는 정부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높다. 이와 같이 회고적 경제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정책에서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이 지배적이어서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대응이나 전망도 매우 부정적이다.

20) 이러한 경제악화에 대한 국민인식은 실제 경제지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인당 GNI는 2005년 1만7,531달러, 2006년 1만9,722달러, 2007년 2만1,659달러로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08년에는 19,231달러로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경기침체의 심화로 15,000달러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간 실질 GNI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1998년(-8.3%) 이후 처음이며, 실질무역 손실액은 2008년 49조8,000억원으로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민간소비 역시 5.1%에서 0.9%로 낮아졌고, 수출증가율도 11.9%에서 4.1%로 감소하였으며, 개인 순저축률도 2008년 2.5%로 2002년 0.4%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08년 국민계정: 참조).

〈표 3〉 경제적 요인의 기술통계 결과

(%)

| | | 평균 | ⑤매우 좋아졌다 | ④약간 좋아졌다 | ③ 현상유지 | ②약간 나빠졌다 | ①매우 나빠졌다 | 모름/ 무응답 | 계(%) |
|------------|--------|----------------|-----------------|--------------|----------------------|----------------------|-------------|------------|-------|
| 가정경제 | (표준편차) | | | | | | | | |
| 상황 | | 2.41 (.81) | .5 5.8 | 5.3 43.2 | | 36.9 50.9 | 14.0 . | .1 | 100.0 |
| | | 평균 | ⑤매우 좋아졌다 | ④약간 좋아졌다 | ③ 현상유지 | ②약간 나빠졌다 | ①매우 나빠졌다 | 모름/ 무응답 | 계 |
| 국가경제 | (표준편차) | | | | | | | | |
| 상황 | | 1.49 (.67) | .1 1.4 | 1.3 5.4 | | 34.2 93.1 | 58.9 . | .1 | 100.0 |
| | | 정부 | 정당/국회 | 기업 | 국민개개인 | 기타 | 모름/ 무응답 | 계 | |
| 경제악화 책임 | | 43.0 | 18.0 | 7.1 | 8.0 | 22.8 | 1.1 | 100.0 | |
| | | 평균 | ④매우 잘 대처함 | ③대체로 잘대처함 | ②별로 잘 대처 못함 | ①전혀 잘 대처 못함 | 모름/ 무응답 | 계 | |
| 경제정책 | (표준편차) | | | | | | | | |
| 평가 | | 1.99 (.67) | .7 20.3 | 19.6 . | 56.5 78.8 | 22.3 . | .9 | 100.0 | |

주) 응답범주의 ⑤~① 또는 ④~①은 역코딩한 수치임.

다음으로 비경제적 요인에 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비경제적 정부성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도입한 대북정책에 따른 군사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평가이다. 분석결과, 북한에 의한 군사적 분쟁가능성에 대한 평균값은 2.65(표준편차 .69)로 나타나 안보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전체의 1/3이상인 38.4%(매우 높다 3.9% + 약간 높다 34.6%)가 군사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보이는 것은 현 정부 들어 김대중정부 이후 유지되었던 온건한 대북정책의 기조가 변화하면서 남북 간에 새로운 긴장이 촉발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²¹⁾ 둘째, 정책이념을 알아보기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적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60% 이상이 경제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정부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는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서로 다른 경제양극화 해소(33.9%)와 경제성장(26.6%)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라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경제문제 해결책을 경제성장이 아니면 분배개선이 아니 하는 상호 갈등적인 사회정책적 이념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이념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진보와 보수 및 중도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정치이념을 중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36.9%로 가장 높은 가운데

21)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최근의 다른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 77%가 남북관계 악화에는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시사저널, 2009. 2.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59>)

데 보수가 32.4%, 진보가 30.5%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정당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이 43.0%로 가장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민주당 15.3%, 민주노동당 8.3%의 순이며,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2%로 나타나, 이 연구의 관심사인 대통령소속정당과 일치하는 한나라당의 정당일체감을 갖는 규모는 전체의 43.0%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신뢰는 평균값 2.08(표준편차 .81)로 나타나 현 집권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응답비율로 볼 때,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신뢰한다는 경우는 29.4%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앞에서 본 대통령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사안이다.

〈표 4〉 비경제적 요인의 기술통계 결과

(%)

| 안보상황: 군사적 분쟁가능성 | 평균 (표준편차) | ① 매우 높음 | ② 약간 높음 | ③ 별로 없음 | ④ 전혀 없음 | 모름/ 무응답 | 계 |
|-----------------------|----------------|------------|------------|------------|---------------|------------|-------|
| | 2.66 (.69) | 3.9 | 34.6 | 52.5 | 8.4 | | |
| 국정우선 과제 | 1. 경제 양극화해소 | 2. 경제성장 | 3. 국민통합 | 4. 정치개혁 | 5. 삶의 질 개선 | ... | 계 |
| | 33.9 | 26.6 | 13.9 | 7.4 | 6.0 | ... | 100.0 |
| 정치이념 | 진보 (0~4) | | 중도 (5) | | 보수 (6~10) | | 계 |
| | 30.5 | | 36.9 | | 32.4 | | 100.0 |
| 정당지지 | 1. 한나라당 | 2. 민주당 | 3. 민주노동당 | 4. 자유선진당 | ... | 무당파 | 계 |
| | 43.0 | 15.3 | 8.2 | 2.8 | ... | 32.2 | 100.0 |
| 정부신뢰 | 평균 (표준편차) | ④ 매우 신뢰 | ③ 약간 신뢰 | ② 신뢰 않음 | ① 전혀 신뢰 않음 | 모름/ 무응답 | 계 |
| | 2.08 (.81) | 4.1 | 35.3 | 45.2 | 25.1 | .2 | 100.0 |

주) 응답범주의 ④~①은 역코딩한 수치임.

2. 대통령 지지의 영향요인

그러면, 이러한 선행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가? 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모형에 포함된 경제적 요인, 비경제적 요인 및 개인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²²⁾ 투입된 경제적 요인은 개인경제상황, 국가경제상황, 경제악화책임, 경제정

22)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대통령 지지가 서열척도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OLS 회귀분석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서열척도의 경우에는 순위

책평가의 4개 변수이다. 여기에서 경제악화책임 변수는 정부책임을 1로 하고 나머지를 0으로 한 더미변수이다. 비경제적 요인은 정부성과(안보상황), 정책이념, 정치이념, 정당일체감, 정부신뢰 5개 변수이다. 정책이념의 실제 투입변수는 경제성장과 양극화해소를 각각 1로 하고 나머지를 0으로 한 경제성장과 양극화해소의 2개 더미변수이며, 정당일체감은 한나라당지지를 1로 하고 나머지를 0으로 한 더미변수이다.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지역 등 개인적 변수들 중에서 지역은 영남과 호남의 2개 지역더미변수를 이용하였다.²³⁾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수정된 R²값이 0.577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공선성통계량(공차한계와 VIF)을 검토할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거의 없으며 Durbin-Watson값을 기준으로 할 때 자기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대통령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로는 국가 경제상황($\beta=.055$, $p<.05$), 정부책임더미($\beta=-.102$, $p<.001$), 경제정책평가($\beta=.356$, $p<.001$) 등 경제적 요인변수와 경제성장더미($\beta=.050$, $p<.05$), 정당일체감($\beta=.154$, $p<.001$), 정부신뢰($\beta=.283$, $p<.001$) 등 비경제적 요인변수, 그리고 개인속성변수로 연령($\beta=.107$, $p<.001$)과 학력($\beta=-.060$, $p<.05$)이다. 이는 다시 말해, 경제적 차원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국가경제여건을 긍정적으로 회고 할수록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경제악화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대통령 지지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비경제적 차원에서는 경제성장을 우선적 국정과제로 인식할수록 대통령을 지지하며, 대통령에 대한 정당일체감이 지지요인으로 작용하고,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대통령에 대한 지지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속성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대통령지지도가 높지만, 고학력자일수록 지지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된 프로빗(Ordered Probit) 분석이나 순위화된 로지스틱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태도 분석에 있어 회귀분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방법론적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OLS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지만, 이러한 논란을 감안하여 순위화 된 프로빗 분석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OLS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2> 참조).

- 23) 지역변수를 이들 2개 지역 더미변수로 투입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은 영남지역과 반대로 가장 지지도가 낮은 호남지역을 각각 더미 변수로 투입하여 지역주의가 대통령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 24) 독립변수간 상관성에 대해서는 <부록 표 3>을 참고할 것.

〈표 5〉 OLS 회귀분석 결과

| | 대통령 지지 | | | |
|---------------------|---------|-----------|-----------|-------|
| | β | t | 공차한계 | VIF |
| 상 수 | (.458) | 2.746** | | |
| X11 : 개인경제상황 | -.025 | -1.078 | .848 | 1.179 |
| X12 : 국가경제상황 | .055 | 2.335* | .832 | 1.202 |
| X13 : 경제악화정부책임(d) | -.102 | -4.315*** | .829 | 1.206 |
| X14 : 경제정책평가 | .356 | 13.211*** | .644 | 1.554 |
| X21 : 정부성과(안보상황) | .023 | 1.029 | .929 | 1.077 |
| X22 : 경제성장(d) | .050 | 2.046* | .755 | 1.324 |
| X23 : 양극화해소(d) | .016 | .663 | .782 | 1.279 |
| X24 : 정치이념(진보-보수) | .000 | .010 | .767 | 1.303 |
| X25 : 정당일체감-한나라당(d) | .154 | 6.817*** | .919 | 1.089 |
| X26 : 정부신뢰 | .283 | 10.523*** | .646 | 1.548 |
| X31 : 성 별 | .042 | 1.838 | .926 | 1.106 |
| X32 : 연 령 | .107 | 4.260*** | .916 | 1.349 |
| X33 : 학 력 | -.060 | -2.380* | .904 | 1.372 |
| X34 : 소 득 | -.016 | -.670 | .741 | 1.194 |
| X34 : 지 역-영남(d) | .023 | 1.018 | .729 | 1.079 |
| X35 : 지 역-호남(d) | -.010 | -.464 | .838 | 1.092 |
| 수정된 R2 | | | .577 | |
| F | | | 78.246*** | |
| Durbin-Watson | | | 2.135 | |
| N | | | 1,000 | |

* p < .05, ** p < .01, *** p < .001

(d) = 더미변수, 상수의 ()는 비표준화계수(B)임.

그러면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대통령지지에 대한 경제적 요인의 설명력이 검증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통령선거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재정상황은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국가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통령지지에 대한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은 회고적인 사회적 투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개인경제보다는 국가경제여건을 준거로 삼는 사회지향적 투표의 영향력($\beta=.055$, $p<.05$)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는 점을 주의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 먼저 국가경제상황에 대한 응답자들 간에 인식 차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회고적 국가경제 평가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앞의 기술통계에 본 바와 같이, 국가경제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1.4%, 현상유지는 5.4%에 불과한 반면, 93.1%가 악화되었다는 평가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변이

(variation)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회고적 경제투표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소재모형의 설명력이 대통령지지에서도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즉 경제악화에 대한 정부책임 더미변수의 영향력($\beta=102$, $p<.001$)이 경제상황인식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제상황에 대한 인지보다는 경제악화에 대한 정부책임성의 인식도가 대통령국정운영 지지에 더 강력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지지의 선행변수로서 경제성과는 책임소재모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 경제정책평가의 영향력($\beta=.356$, $p<.001$)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전망적 투표가 대통령지지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전망적 투표이론의 핵심적 문제는 유권자들이 경제정책의 결과에 따라 지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⁵⁾ 경제정책평가의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지지에 있어서도 경제문제의 해결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에는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소위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취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경제정책 능력에 대한 기대 감소로 나타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감소로 연결되었다고 이해된다.

한편, 대통령지지에 대한 설명변수로서 정당일체감의 유의한 영향력($\beta=.154$, $p<.001$)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지지의 전형적 설명변수인 정당일체감이 정부성과에 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지각하게 하는 필터링 장치로 작용하며 정치행태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렇지만 정치이념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 심리적 귀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의 주장처럼 기존 대통령 지지층에서 실용노선 지지자들은 이탈하고 보수적 이념 성향을 가진 지지층으로 재형성되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²⁶⁾ 그

25) 전망적 투표는 기본적으로 정책에 관심을 두고 미래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현재의 경제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고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26) 이를 좀 더 검토하기 위해 정당지지와 정치이념을 각각 대통령지지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당지지에서는 한나당 62.8%가 대통령을 지지한 반면에 민주당 17.7%, 자유선진당 26.3%, 친박연대 25.1%, 민주노동당 7.9%, 창조한국당 18.1%, 진보신당 11.0%, 무당파 19.5%가 지지하여 한나당지지자와 다른 정당지지자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정치이념에서는 보수층은 44.1%, 중도는 28.3%, 진보는 24.4%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당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 지지자와 이념성향을 교차분석한 결과에서는 보수 45.5%, 중도 27.4%, 진보 21.4%가 한나라당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정당지지와 이념성향은 분리되고 있으며, 대

리고 정책이념변수로 선정한 양극화해소 더미변수의 영향력은 없었지만, 경제성장 더미변수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된 것($\beta=.050$, $p<.05$)도 흥미로운 발견이다. 이는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분배구조의 개선보다는 성장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양극화해소를 우선적 국정과제로 간주하는 정책성향이 대통령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까닭은 현재의 심각한 국가적 경제위기 인식이 양극화해소여부에 따른 대통령평가를 어렵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 도입한 정부신뢰 변수가 경제정책평가 다음으로 대통령지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요인($\beta=283$, $p<.001$)이라는 분석결과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에 대한 신뢰감소와 상실은 정부정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불확실성 상황에서 정책대상 집단은 흔히 새로운 정책에 수반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략적 행동을 강구하게 되며, 이는 결국 정책이 의도한 목표달성을 보다는 예기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박통희, 2000).²⁷⁾ 그리고 이 결과는 정책문제의 악화와 그에 따른 정부불신을 확산시켜 정책불응을 야기하는 이른바, ‘신뢰상실에 따른 정부실패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정부신뢰가 낮은 현실에서 대통령지지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정책의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정부신뢰가 대통령지지의 영향요인이라는 발견은 실천적 측면에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정부신뢰는 특정 정책성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하는 지지율과 달리 정부성과평가의 누적된 산물이란 것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즉 단기적인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보다는 정책적 일관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²⁸⁾ 정부신뢰의 구축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판이며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

통령 지지에는 이념성향과 상당한 정도로 분리된 한나당 정당일체감이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7) 박통희(2000)에 따르면, 정책대상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관련 문제자체가 수반하는 객관적 불확실성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행동 불확실성의 곱이 되는데, 정부신뢰는 이러한 정부행동에 내재된 불확실성의 평가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부신뢰의 저하는 정책문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증폭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렇게 증폭된 불확실성은 정책대상집단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촉발하게 되어 문제를 악화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박통희, 2000: 657-658).
- 28) 이런 점은 참여정부에서 나타난 국민적 신뢰의 상실이 대중적 인기영합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진단(이종식, 2007)은 대통령지지와 정부신뢰를 다룸에 있어 하나의 교훈이다.

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 중에서 연령($\beta=.108$, $p<.001$)은 대통령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수준은 부(-)의 영향($\beta=-.060$, $p<.05$)을 주고 있다. 간단히 말해 한국의 대통령지지에 나타나는 이질적인 특성은 비판의식이 강한 젊은 고학력층 남성일수록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⁹⁾ 한편, 지역더미 분석결과를 보면, 영남더미($\beta=.021$)는 양의 값, 호남더미($\beta=1.011$)는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지지도가 영남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높고, 호남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p<.05$)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통령지지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변수가 유의성이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일차적으로 대통령지지와 대통령선거에 작용하는 정치적 선택의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지지에서는 지역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선거는 지역주의에 따른 특정 후보의 선택압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제로-섬게임이 되지만,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특정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선택이나 철회에 따른 심리적 딜레마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지역에 따른 후보자별 지지율 차이가 극명한 대통령선거와 달리, 30%의 낮은 지지율 범위 내에서 나타난 특정 지역(영남 혹은 호남)의 지지도 편차는 전국 차원의 대통령 지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⁰⁾ 결국 회귀분석 결과로 보면, 지역주의는 특정한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지만 전국규모의 대통령지지도에서는 다른 설명변수들에 의해 영향력이 흡수되는 것으로 추론된다.³¹⁾ 이상에서 논의한 전반적인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6>

-
- 29) 이를 대통령선거지지결과와 관련하여 보면,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투표한 20~40대의 고학력층이 대통령취임이후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주된 지지철회 집단이라고 해석된다.
- 30) 이런 점은 대통령지지보다 지역차이가 더 큰 대통령선거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 선택에 대한 로짓회귀 분석결과에서도 영남더미는 영향력이 확인되었지만 호남더미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아란, 2008: 101). 이는 영남더미와 호남더미 간에는 상당한 역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변수가 동시에 투입될 때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 31) 앞에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대통령지지도에 대한 t-검증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지지에 대해 영남더미와 호남더미만을 투입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결국 이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지역주의적 영향력이 대통령지지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설명변수가 투입되는 회귀모형에서는 영남더미와 호남더미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지역주의가 대통령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

과 같다.

〈표 6〉 가설 검증 결과

| | 독립변수 | 가설 | 분석 결과 | | 독립변수 | 가설 | 분석 결과 | |
|------------|--------------|----|----------|----------------|-----------|-----|-------|--|
| 경제적 요인 | X11 개인경제여건 | H1 | 기각 | 개인 속성 요인 | X25 정당일체감 | H8 | 채택 | |
| | X12 국가경제여건 | H2 | 채택 | | X26 정부신뢰 | H9 | 채택 | |
| | X13 경제악화정부책임 | H3 | 채택 | | X31 성별 | H10 | 기각 | |
| | X14 경제정책 평가 | H4 | 채택 | | X32 연령 | H11 | 채택 | |
| 비경제적 요인 | X21 대북정책 성과 | H5 | 기각 | | X33 학력 | H12 | 채택 | |
| | X22 경제성장선호 | H6 | 부분 채택 | | X34 소득 | H13 | 기각 | |
| | X23 양극화해소선호 | | | | X35 지역-영남 | H14 | 기각 | |
| | X24 정치이념 | H7 | 기각 | | X36 지역-호남 | | | |

IV. 맺는 말

대통령지지율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로서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추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만,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이후 여러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면서 국정운영의 난맥에 빠진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지율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클린턴이나 부시 전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권위를 손상시키는 스캔들이나 전쟁과 경제위기 같은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5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였다는 사실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낮은 지지도의 문제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추진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의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것일까?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출발하였다. 미국이나 서유럽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대통령지지와 정당지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으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지지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저널리즘이나 정치적 토론 차원에서만 논의될 뿐이며 대통령지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선거분

는 이 연구에서 구축한 분석모형과는 다른 형태의 분석모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통령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지역 주의의 영향력 검증을 위한 구체적 분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석에만 치중되어 있다.³²⁾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 한 것이다. 선행연구가 척박한 현실에서 연구자는 최근 대통령선거분석에서 설명력을 인정받는 경제투표모형을 대통령지지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 삼고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동시에 서구선진국의 정치경제적 안정성을 전제로 한 경제투표모형의 한국적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경제적 설명요인이 함께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통합한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실증분석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는 우선적으로 국가경제악화에 대한 정부책임의 인식과 전망적 기대를 반영하는 경제정책평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경제정책평가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은 대통령지지에 있어서도 선거와 마찬가지로 전망적 평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결국 이 연구의 결과는 회고적 책임소재모형과 전망적 기대모형이 결합된 경제투표이론이 한국의 대통령선거 뿐만 아니라 대통령지지도에 대한 설명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제성장 더미변수의 유의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지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국가경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지지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우선적으로 현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경제정책의 효과나 그에 따른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믿음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한국의 대통령 지지의 설명요인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통령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인 시간과 정치적 사건과 같은 변수가 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특정 시점의 횡단적 연구라는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1년이라는 시간적 범위의 제약성을 피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연구의 결과는 전통적인 정치적 변수인 정당일체감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어 정치적 설명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런데 정당일체감-즉, 한나당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이 진보에서 중도 그리고 보수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횡단하여 대통령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발견이다. 이것은 한국의 정당들이 이념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적 정향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정치의 특성이라 할 지역기반의 정당정치 결과로 보기도 어렵다. 그것은 지역간 차이가

32) 대통령임기의 단임제라는 특성이 대통령지지율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다루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중임제 국가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차기 선거의 승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지만, 단임제 국가의 현직 대통령에게 이러한 유인기제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정운영 평가에 있어서는 지지선택의 메커니즘이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지역주의 압력으로 제로-섬 게임 상황으로 전개되는 대통령선거는 차선이나 차악의 선택을 강요받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압박요인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지역균열이 변화하고 있다고 단정하거나 지역주의의 정치적 영향력 자체를 쉽게 재단할 수는 없다. 지역주의가 대통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수간 상호영향력과 선후관계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분석적 함의는 사회자본론자들에 의해 강조되는 신뢰이론이 대통령 지지의 설명에도 적용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신뢰 변수가 대통령지지의 핵심적 설명변수로 검증된 것은 대통령후보지지의 영향요인 연구에서 신뢰의 영향력을 확인한 양건모·오숙영(2008)의 연구결과와 부합되는 것이다. 사회지향적 투표의 “이타적 동기”는 사회자본론의 호혜성의 규범요소로서 “이타주의(altruism)”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자본론은 대통령 지지에 대한 상당한 설명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신뢰의 형성요인으로 거론되는 다양한 정책영역의 정부성과나 청렴성, 일관성, 공정성 등의 변수들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연구에서 이런 모든 주제와 변수를 포괄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의 초점을 흐릴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한계가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주는 함의를 손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여기서 적시한 주제들은 한국의 대통령지지연구의 지평을 확장할 과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서베이 자료를 통한 주관적 분석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이용한 종단적 연구도 활성화되어 한국의 대통령지지와 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04). 임기 중 클린턴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경제와 도덕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2): 495-551.
- _____. (2005). 대통령지지율과 2004년 대통령선거: 1952-2000년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5(1): 153-174.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_____. (2008). 지역주의는 변화했을까? 이현우·권혁용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_____. (2009). 386세대는 어디로 갔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이념과 세대. 김민전·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유권자3」.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 권혁용. (2008). 2007년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경제투표. 이현우·권혁용 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권혁용·정한율. (2009). 경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의 경제투표. 김민전·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유권자3」.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 김민전. (2008). 2007 대선, 그리고 정치균열의 진화. 이현우·권혁용 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김영태. (2005). 대통령지지와 정당지지 : 노무현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4(2): 149-172.
- 김욱. (2006). 16대 대선에서 세대, 이념, 그리고 가치의 영향력.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V」. 서울: 오름.
- 김장수. (2007). 선거연구와 패널여론조사. 이내영외 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2009). 대통령 취임 1주년 국가현안에 관한 여론조사.
- 박경산. (1993).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경제적 투표. 「한국정치학회보」, 27(1): 185-208.
- 박종민. (1991). 정책산출이 정부신뢰에 주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25(1): 291-305.
- 박통희. (2000). 한국정부의 신뢰성과 시장경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손호중·채원호.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 수거물 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87-113.
- 양건모·오숙영. (2008). 대통령 후보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뢰이론에 따른 제17대 대선 후보자 비교.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23-446.
- 이내영. (2007). 5·31 지방선거와 정당지지기반의 재편: 이탈투표의 분석. 「변화하는 유권자」.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이숙종. (2006). 정부신뢰와 거버넌스. 「국정관리연구」, 9(3): 143-172.
- 이시원. (1993).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제6공화국 정부에 대한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철. (2008).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제투표: 유권자의 경제적 인식과 투표결정. 「현대정치연구」, 창간호: 111-136.
- 이종식. (2007). 효율적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문제점과 방향. 「NGO연구」, 5(2): 1-23.

- 이현우. (1998). 한국에서의 경제투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Ⅱ」. 서울: 푸른길.
- _____. (1999). 미국의 개인적 경제투표에 관한 재검토 : 잠재변수를 이용한 구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3(2): 241-257.
- 정한율. (2007). 한국에서 경제투표는 가능한가. 이내영외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본 5·31 지방선거」.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 조성대. (2004). 4·15 총선과 한국 정치의 갈등구조: 지역주의와 갈등의 대체. 한신 대 사회과학연구소 심포지움 발표논문.
- 조기숙·남지현. (2007).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신뢰 :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3(2): 61-93.
- 황아란. (2008).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선택과 정당태도의 복합 지표 모형. 「현대정치연구」, 창간호: 86-110.

- Aldrich, John H., John L. Sullivan, and Edgar Borgida. (1989). Foreign Affairs and Issue Voting: Do Presidential Candidates 'Waltz before a Blind Aud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123-41.
- Anderson, Christopher J. (2007). The End of Economic Voting? Contingency Dilemmas and the Limit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0: 271-296.
- Bartel, Larry M & John Zaller. (2001). Presidential Vote Models: A Recount.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4(1).
- Brace, P. & Hinkley, B. (1991). The structure of presidential approval: constraints within and across presidencies. *The Journal of Politics*, 53: 993-1017.
- Burden, Barry C. and Anthony Mughan. (2003).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Presidential Approval. *Public Opinion Quarterly*, 67: 555-578.
- Cohen, Jeffrey E. (2004). Economic Perceptions and Executive Approval in Comparative Perspective. *Political Behavior*, 26(1): 27-43.
- Conover, Pamela J., Stanley Feldman, and Kathleen Knight. (1987). The Personal and Political Underpinnings of Economic Foreca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 559-583.
- Druckman, James N. and Justin W. Holmes. (2004). Does Presidential Rhetoric Matter? Priming and Presidential Approval.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4(4): 755-778.
- Edward, George C. III., William Mitchell, and Reed Welch. (1995). Explaining Presidential Approval: The Significance of Issue Salience. *American*

-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1): 108-134.
- Erikson, Robert and Kent Tedin. (2005). *American Public Opinion: Its Origins, Contents, and Impact*. New York: Pearson Longman.
- Gilens, Martin. (1988). Gender and Support fo Reagan: A Comprehensive Model of Presidential Approv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2): 19-49
- Gomez, B. T. & J. M. Wilson. (2006). Cognitive Heterogeneity and Economic Vo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Four Democratic Elector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 127-145.
- Holsti, Ole R. (1996). Public Opin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ernell, Samuel. (1978). Explaining Presidential Popula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2): 506-522.
- Kiewiet, DR. and Udell M. (1998). Twenty-five Years After Kramer: An Assessment of Economic Retrospective Voting Based upon Improved Estimates of Income and Unemployment. *Economic Politics*, 10: 219-248.
- Kinder, Donald. and Kiewiet, Roderick.(1979). Economic Grievances and Political Behavior: The Role of Personal Discontents and Collective Judgments in Congressional vot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 495-527
- _____. (1981). Sociotropic Politic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5.
- Kirchgaessner, Gehard. (1991). Economic Conditions and Popularity of West German Parties: Before and After the 1982 Government Change. *Economic and Politics: The Calculus of Support*, 65.
- Kramer, G. (1971). Short-term Fluctuations in U.S. Voting Behavior 1896-1964.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131-145.
- _____. (1983). The Ecological Fallacy Revise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 92-111.
- Lewis-Beck, Michael and Mary Stegmaier. (2000). Economic Determinants of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183-219.
- MacKuen, Michael B.(1983). Political Drama, Economic Conditions, and the Dynamics of Presidential Popular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7(2): 165-192.
- MacKuen, Michael B., Erickson, Robert S., and James A. Stimson. (1992).

- Peasants or Bankers? The American Electorate and the U.S. Econom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 69-105.
- Mayer, R. C., Davis, J. H., & F. D. Schoorman.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709-734.
- Mueller, John E. (1970). President Popularity from Truman to Johns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1): 18-34.
- Newman, Brian. (2003). Personal Integrity and Presidential Approval: The Effects of Integrity Assessments, 1980-2000. *Public Opinion Quarterly*, 67(3): 335-367.
- Nickelsburg, Michael. and Helmut Norpoth. (2000). Commander in Chief or Chief Economist: The President in the Eye of the Public. *Electoral Studies*, 19: 313-332.
- Norpoth H. (1996). Presidents and the Prospective Voter. *Journal of Politics*, 58(3): 776-792.
- Rattinger, Hans. (1991). Unemployment and Elections in West Germany.
- Norpoth, Helmut(eds.). *Economic and Politics: The Calculus of Support*. Ann Arbor.
- Rudolph, Thomas. (2003). Who's Responsible for the Economy? The Formation and Consequences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4): 698-713.
- Stimson, James A. (1976). Public Support for American Presidents: A Cyclical Model. *Public Opinion Quarterly*, 40: 1-21.
- Weisberg, Herbert. (1987). The Demographics of New Voting Gap: Marital Difference in American Voting. *Public Opinion Quarterly*, 51: 335-343.

[부록 표 1] 응답자 특성

| 전체 | 빈도(명) 비율(%) | | 전체 | 빈도(명) 비율(%) | | | |
|----|-------------|-------|------|-------------|------------|-----|------|
| | 1,000 | 100.0 | | | | | |
| 성별 | 남자 | 494 | 49.4 | 소득 | 200만원 이하 | 233 | 23.3 |
| | 여자 | 506 | 50.6 | | 201-300만원 | 245 | 24.5 |
| 연령 | 20대 이하 | 205 | 20.5 | | 301-400만원 | 205 | 20.5 |
| | 30대 | 221 | 22.1 | | 401만원 이상 | 294 | 29.4 |
| 학력 | 40대 | 227 | 22.7 | | 모름/무응답 | 22 | 2.2 |
| | 50대 | 178 | 17.8 | | | | |
| | 60대 이상 | 169 | 16.9 | 권역 | 서울 | 212 | 21.2 |
| | | | | | 인천, 경기 | 275 | 27.5 |
| | 중졸 이하 | 74 | 7.4 | | 대전, 충남, 충북 | 101 | 10.1 |
| | 고졸 | 463 | 46.3 | | 광주, 전남, 전북 | 104 | 10.4 |
| | 대졸 이상 | 455 | 45.5 | | 대구, 경북 | 105 | 10.5 |
| | 모름/무응답 | 8 | .8 | | 부산, 울산, 경남 | 161 | 16.1 |
| | | | | | 강원, 제주 | 42 | 4.2 |

주) 주민등록인구현황(2008. 12. 31.)의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구성비를 준거로 표본 추출하였음.

[부록 표 2] 순위화된 프로빗(Ordered Probit) 분석 결과

Ordered Probit Estimates

Number of Obs = 907

LR $\chi^2(16)$ = 753.90

Prob > χ^2 = 0.0000

Log Likelihood = -684.30121

Pseudo R² = 0.3552

| Ind. Var. | Coef. | Std. Err. | z | P > z |
|--------------|-----------|-----------|-------|-----------|
| X11 개인경제 | -.0687607 | .0555908 | -1.24 | .0401954 |
| X12 국가경제 | .151575 | .0663611 | 2.28 | .28163403 |
| X13 정부책임(d) | -.3826344 | .0904233 | -4.23 | -.205408 |
| X14 경제정책 | .9470168 | .0793597 | 11.93 | 1.102559 |
| X21 안보상황 | .0562607 | .0627005 | 0.90 | .1791514 |
| X22 정당일체감(d) | .5911369 | .0997169 | 5.93 | .7865784 |
| X23 양극화해소 | .025396 | .0970732 | 0.26 | .2156559 |
| X24 경제성장 | .1153694 | .1043566 | 1.11 | .3199046 |
| X25 정치이념 | .0127926 | .0212037 | 0.60 | .0543512 |
| X26 정부신뢰 | .6290968 | .0639784 | 9.83 | .7544921 |
| X31 성별 | .1369025 | .0849394 | 1.61 | .3033836 |
| X32 연령 | .1295729 | .0347788 | 3.73 | .1997381 |
| X33 학력 | -.1687446 | .0767256 | -2.20 | -.0183651 |
| X34 소득 | -.0031438 | .0387951 | -0.08 | .0728933 |
| X35 영남지역(d) | .0866425 | .0936843 | 0.92 | .2702605 |
| X36 호남지역(d) | .0424325 | .1415311 | 0.30 | .3198284 |
| CUT 1 | 2.65211 | .398232 | | |
| CUT 2 | 4.450101 | .41224 | | |
| CUT 3 | 7.162725 | .4647556 | | |

[부록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

| | Y | X_{11} | X_{12} | X_{13} | X_{14} | X_{21} | X_{22} | X_{23} | X_{24} | X_{25} | X_{26} | X_{31} | X_{32} | X_{33} | X_{34} | X_{35} | X_{36} |
|----------|-----------|----------|-----------|-----------|-----------|-----------|-----------|-----------|----------|----------|-----------|-----------|-----------|----------|----------|-----------|----------|
| Y | 1 | | | | | | | | | | | | | | | | |
| X_{11} | 0.017 | 1 | | | | | | | | | | | | | | | |
| X_{12} | 0.179*** | 0.292*** | 1 | | | | | | | | | | | | | | |
| X_{13} | -0.365*** | -0.066* | -0.210*** | 1 | | | | | | | | | | | | | |
| X_{14} | 0.646*** | 0.053 | 0.168*** | -0.294*** | 1 | | | | | | | | | | | | |
| X_{21} | 0.018 | -0.012 | -0.082** | -0.042 | -0.022 | 1 | | | | | | | | | | | |
| X_{22} | 0.451*** | 0.005 | 0.072* | -0.199*** | 0.359*** | -0.026 | 1 | | | | | | | | | | |
| X_{23} | -0.047 | 0.015 | -0.016 | -0.025 | -0.079* | 0.049 | -0.044 | 1 | | | | | | | | | |
| X_{24} | 0.100** | -0.040 | -0.071* | -0.012 | 0.101*** | 0.002 | 0.074* | -0.436*** | 1 | | | | | | | | |
| X_{25} | 0.151*** | -0.057* | -0.027 | -0.079* | 0.150*** | -0.068* | 0.208*** | -0.004 | 0.096*** | 1 | | | | | | | |
| X_{26} | 0.602*** | 0.059 | 0.187*** | -0.323*** | 0.517*** | -0.024 | 0.373*** | -0.018 | 0.059 | 0.143*** | 1 | | | | | | |
| X_{31} | 0.018* | -0.020 | -0.045 | 0.074* | 0.009 | -0.139*** | 0.086** | 0.035 | 0.087** | 0.031 | 0.037 | 1 | | | | | |
| X_{32} | 0.354*** | -0.082** | -0.051 | -0.153*** | 0.260 | 0.142 | 0.235 | 0.018 | 0.002 | 0.111*** | 0.240*** | 0.028 | 1 | | | | |
| X_{33} | -0.263*** | 0.127*** | -0.034 | 0.113*** | -0.199*** | 0.076* | -0.119*** | 0.046 | 0.024 | -0.010 | -0.155*** | -0.211*** | -0.372*** | 1 | | | |
| X_{34} | -0.092** | 0.189*** | -0.044 | 0.032 | -0.059 | 0.083** | -0.005 | 0.011 | 0.063* | 0.040 | -0.044 | -0.011 | -0.201*** | 0.337*** | 1 | | |
| X_{35} | 0.107*** | -0.014 | 0.044 | -0.067* | 0.085* | -0.020 | 0.172*** | 0.047 | -0.005 | 0.044 | 0.051 | 0.002 | 0.032 | -0.051 | -0.064* | 1 | |
| X_{36} | -0.107*** | -0.019 | -0.027 | 0.055 | -0.093** | 0.020 | -0.186*** | 0.025 | -0.044 | -0.085** | -0.115*** | 0.002 | 0.037 | -0.030 | -0.004 | -0.205*** | 1 |

* $p < .05$ ** $p < .01$ *** $p < .001$

Abstract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Presidential Approval after the First Year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Kon-Su Yi

This study makes an empirical inquiry about the primary factors that influence the public's approval of the president in Korea. In order to do this, applicability was examined based on an analysis of presidential elections. While keeping the fundamentality of the Economic Evaluation Model as a basis, several variables were constructed that might explain presidential approval by considering typical political factors in deriving non-economic factors that fit the Korean situation. In particular, the economic factors that were used in this study are egocentric perspective, sociotropic perspective,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prospective evaluation. The non-economic factors that were used in this study included North Korea Policy, policy ideology (economic growth versus alleviating economic polarization), political ideology, and party identification, as well as government trust. For the actual analysis, the East Asia Institute's public opinion research (February, 2009) was used as the data source.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prospective evalua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was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was a significant factor. It has been confirmed that government trust and party identification are determining factors. It has been known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presidential approval according to sex, age, and academic background. In addition to these findings there is a discussion of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presidential approval in Korea.

【Key words: Presidential approval, Executive approval, Economic Voting】